

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[국방부 · 방사청]

과제목표	■ 방위사업 비리 근절·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■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&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
총평	■ 국방 R&D 혁신, 부품 국산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행 ■ 다만, 방산업체 해킹 사고 등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있어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
'21년도 주요성과	■ 방산비리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 강화로, 청렴 방위사업 구현 •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('17년) 마련 이후, 방위사업 종사자에 의한 비리 0건 및 국가 부패인식지수 지속 상승* 등 방산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* 부패인식지수(CPI, 국제투명성기구) : ('18년) 45위 → ('19년) 39위 → ('20년) 33위 •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인 「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」 신설·운영 및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성과활동 보고(상하반기)로 투명성 제고 ■ 신속획득제도로 국방 무기 획득체계의 신속성·효율성 향상 • 신속시범획득사업*('20년~)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**를 마련하고, 사업범위를 '구매'에서 '구매+연구개발'로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 도입 *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서 시범운용 후 소요에 따라 전력화로 연계하는 사업으로, '최초 기획부터 軍 납품까지의 소요기간'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 ** 방위사업법시행규칙('21.1월), 방위사업관리규정('21.4월),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('21.6월) 등 • '21년 신속시범획득사업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군 시범운용 중이며, '20년 착수사업(6개) 중 2개(수직이착륙드론, 안티든론건)에 대해 군 소요 결정 완료 ■ 국방 R&D 역량을 첨단기술에 집중하여, 미래전장 환경 대비 •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시행('21.4월)으로 창의적 연구개발 및 개방·협업 등을 위한 국방 R&D 혁신 기반 마련 및 성실수행 인정제도 대상 확대* * '핵심기술개발'에 한정된 제도를 '전체 기술개발'로 확대하여,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• 미래 군사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8대 Game Changer(양자물리, 합성바이오, 극초음속, 무인자율, 미래통신, 에너지, 인공지능, 우주) 분야에 연구개발 집중 투자* * 예산 : '18년 69억원 → '19년 200억원 → '20년 580억원 → '21년 1,204억원 • 방사청 내 '첨단기술사업단'을 설치('21.11월)하고, 국방과학연구소 내 미사일 연구원 등 3개 연구원 및 6개 기술센터를 신설('21.6월)하여 첨단·비닉 중심의 연구소로 재구조화

	• 국방과학기술의 군·산·학·연 협력 강화를 위한 ‘국방과학기술위원회*’ 신설(‘21.10월) *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·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,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등 논의 • 미래도전기술경진대회(‘21.10월), 국방과학기술대전(‘21.12월) 등을 통해 국방 핵심 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관심 제고 ■ 부품 국산화 및 수출지원으로, 방산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•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*」 시행(‘21.4월)으로 국방 중소·벤처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진흥 기반 마련 *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국방 중소·벤처기업 지원,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지체상금 감면 및 연구개발 기간연장 등 •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*(‘21.8월), 방위산업 국가 정책사업 지정제**(‘21.6월), 국산개발부품 등록제도***(‘21.7월) 등 도입 * 지출목표관리제(국내:국외=80:20), 국외 획득비용 할증(50%), 국산부품 비율평가 의무화 등 ** 국가지정사업 연구시 리스크 감소 지원을 통해 업체의 대규모·고난이도 연구개발 참여 유도 *** 이미 개발된 부품을 시스템에 등록·공개하여, 중복개발배제 및 既개발품의 활용성 확대 • 경남·창원 ‘방산혁신클러스터’ 사업 추진으로, 1,770만불(212억원)의 계약추진, 157개 품목 수출 시험평가 지원 등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• 국내 중소·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(진입·성장·도약) 맞춤형 지원* 확대 및 방위산업 공제조합** 신설(‘21.7월) * 국방벤처 지원사업,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,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사업 등 ** 조합 출범 후, 19건의 공제계약 체결(공제료 약 220억원 규모) <정부 출범(‘17.5~) 이후 핵심성과> • 軍·産 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와 사적접촉 신고 의무화(‘18.4월), 방산 분야 취업제한 강화(‘20.6월), 방사청 직원 방산주식 보유금지(‘20.12월) 등 방산비리 사전예방 강화 •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첨단기술을 즉각 활용하여 전력화하는 ‘신속획득 시범사업’(‘19.12월) 및 ‘신속연구개발사업’(‘21.3월) 도입·시행 • 기술변화의 선도적 반영을 위해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도입(‘19.2월),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정(‘20.3월) 등으로 법적·제도적 기반 강화 •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방사청 내 전담조직 구축*, 지원사업 확대** 및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‘21.4월) * 국제협력관 신설 및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(‘18.11월) ** 찾아가는 수출상담 ‘다파고(DAPA-GO)’ 운영(‘18.11월~)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 •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(‘21.8월), 방위산업 국가 정책사업 지정제(‘21.6월), 국산개발부품 등록제도(‘21.7월) 등 도입
개선·보완 필요사항	• 국내 방산업체 해킹 사고*가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국가 주도의 보안관제·사고대응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* (‘21.5월) 한국항공우주산업, (‘21.10월) 대우조선해양